

2017년 4월 8일 시행 / 2017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

행정학개론 기출해설

해설 - 송상호 교수(해커스)

문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②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④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정답④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실적주의이이고 실적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된게 적극적 인사행정이다 대표관료제는 적극적 인사행정에 속한다

- ① 우리나라도 장애인 의무고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과 같은 대표관료제의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② 사회적 약자에게 더많은 임용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역차별로 다원주의 확산보다는 오히려 집단차원의 우대 또는 차별에 따라 집단이기주의를 강화하고, 사회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③ 관료제가 비례적으로 구성되고, 출신집단을 대표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성 및 책임성이 높아지고, 관료제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문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효율성 강조 |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
|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 ㄹ. 고객중심의 행정 |
|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③ ㄷ, ㄹ만 옳은 지문이다

- ㉔ 신행정학은 급박한 사회문제해결에 적실성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과학자의 임무는 연구결과를 통해 인류의 가치를 보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㉕ 고객지향성과 참여의 확대: 행정권의 중국적 근원을 시민으로 보고, 고객의 참여를 강조한다.

- ㉠신행정학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보다 우선적 배려를 통해, 사회적 형평을 강조한다
- ㉡행태주의의 현실 처방성 결여를 비판하고 나온 반논리실증주의 계열이다
- ㉢신행정학은 격동의 시대에 있어서는 행정인이 적극적·독립변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 기업식 정부운영은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문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정답 ④ 관료제의 비정의성(impersonality)은 병폐가 아닌 특징이다. 관료제는 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는 비정의성을 특징으로 한다

- ①관료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인 규칙·절차에 지나치게 영합·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목표전 환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Merton), 부하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이 통제 위주의 관리를 가져올 수 있다(Gouldner).
- ②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는 문서다작주의(Red Tape)·형식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 ③할거주의(割據主義, 국지주의):관료들이 자기의 소속기관·소속부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횡적인 조정·협조가 곤란해질 수 있는(Selznick) 할거주의(割據主義, 국지주의)를 단점으로 가진다

문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 ②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④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정답 ②계급제는 순환보직에 의한 일반행정가 양성을 지향하므로 행정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 ①강한신분보장을 기반으로 한 장기간의 복무로 조직 충성도가 제고된다.
- ③계급만 동일하면 보수 변동 없이 전직·전보가 가능하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용이하고, 공무원의 능력을 여러 분야에 거쳐 발전시킬 수 있다.
- ④직렬에 관계없이 수평적·수직적 이동이 가능하여 공무원의 창의력·적응력이 발전되고 장기간의 복무로 조직 충성도가 제고된다. 그에 따라 장기적 행정계획 추진,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정답③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이 지명한다

①김포시는 지방정부이고,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적용대상이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한다.

④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국무조정실장 이외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다.

문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정답③고객과 접촉하는 일선관료가 자율과 재량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향적 정책집행 접근법의 중요 특징이다.

①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통합모형에 해당한다.

②정책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④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문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②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③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④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정답 ④욕구를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라 욕구의 발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공통적인 이론은 매슬로우(Maslow)와 앨더퍼의 ERG 이론이다.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조직구성원에 게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이 상호독립 되어 있는 거지 계층화된게 아니다.

①불만요인인 작업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불만이 없는 상태가 되지 동기부여는 되지 않는다.

②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은 내용이론이다

③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문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 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④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헌법상 기관이자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인이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문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③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동체인 전체로서 집단을 개인에 우선 시키므로 개인의 이익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①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② 플라톤, 루소 등은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 ④ 과정설은 개인주의·자유주의·다원주의에 입각한 공익관으로,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문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정답 ② 인적자원관리(HRM)은 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하는 Y이론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①③④인적자원이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자원일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인적자원을 조직의 주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적극적 인적자원관리방식이다.

문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③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④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정답 ③

법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문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정답④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의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을 말한다.

- ① 무의사결정은 기존 엘리트세력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억압하지 논의하지 않는다.
- ② 무의사결정은 신엘리트이론이다
- ③ 무의사결정은 정책과정 전 단계에서 일어난다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 ②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 ④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정답 ②최적모형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선택이 없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관·판단력·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①점증모형은 현존 정책에 비하여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관심을 가지며, 비교적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만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하여 한정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 평가한다.
- ③혼합주사모형은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거시적·포괄적으로 탐색(합리모형)하나, 대안결과는 중요한 것만 개괄적으로 예측한다(합리모형의 완화).
- ④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① 문제(problem), ② 해결책(solution), ③ 참여자(participant), ④ 의사결정의 기회(chance)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아무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우연히 만나게 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문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
|------|----|
| ㉠ | ㉡ |
| ① 2년 | 5년 |
| ② 2년 | 3년 |
| ③ 5년 | 3년 |

- ④ 3년 5년

정답 ④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재산등록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문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답 ② 계획예산제도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장기성을 가지는 예산편성 제도라면, 영기준예산제도는 당해 년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여(자원의 최소성을 고려), 매년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①Schick는 「예산개혁단계론(1966)」에서 예산에는 3가지 행정적 기능(통제·관리·계획 기능)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③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 평가제도의 세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은 전체 성과목표 중 1/3에 해당하는 성과목표 내 전체 관리과제가 대상이 된다.

④조세지출예산(tax expenditure budget)은 조세감면의 구체적 내역을 예산구조를 통해 매년 밝히는 것을 말한다.

문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법 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정답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 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관한 특별법 11조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회의조정위원회를 둔다(지방자치법 제168조).

④ 1988년 이후의 지방자치법은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답②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①광역시에 군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이 있다.

③자치계층의 의의로 맞는 지문이다

④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계층은 단층제이다.

문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① X-비효율성은 정부의 독점성 때문에 나타나는 무사안일 시간폐우기식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②지대추구: 지대를 발생시키는 독점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들이 비경쟁체제 하에서 독점적 이익(지대)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경쟁체제에 서라면 기술개발 등 건전한 활동에 투입하여야 할 자원을 비생산적·낭비적 비용(향응·뇌물 등)으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거래비용에는 사전적/사후적 거래비용이 있다

㉠사전비용: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의사결정 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을 포함한다.

㉡사후비용: 계약조건 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 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 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을 포함한다.

④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리손실의 형태에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있다.

문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정답④

①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체이다

공기관의 유형(실정법상 구분)

공 기 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등
	준시장형	토지주택공사, 마사회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위탁집행형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등
기타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문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진화를 추구한다.
-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정답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에 근거한 사전예산관리 제도이다

②통합재정의 활용예시로 옳은 지문이다.

③총사업비관리제도의 의의로 옳은 지문이다

④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